

# 광주지역 보이스피싱 주의보

최근 광주에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가 잇따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3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111건의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해 470명(54명 구속·피해액 16억7000만원)이 검거됐다.

유형별로는 대출 사기 66건, 수사·금융기관 사칭 45건으로 집계됐다.

실제 광주 산신경찰서는 지난 12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돈을 가로채려한 혐의(사기 미수)로 김모(24·여)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10일 오전 11시30분께 광주 북구 한 초등학교 주변에서 금감원 직원을 사칭, 시기 사건에 연루돼 조사가 필요하다며 A(27·여)씨로부터 계좌에 있는 800만원을

## 올해 총 111건 발생·470명 검거

## 대출 사기 66건·기관 사칭 45건

가로채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구직사이트에서 알게된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연락,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1일에는 광주 광산구 우산동 한 모텔 앞에서 B(59·여)씨에게 아들을 납치했다고 속여 1900만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20대 중국인 부부가 구속됐다.

이들은 “보증을 신 아들을 납치했다. 돈을 주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거짓 협박한 뒤 가로챈 돈을 중국에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도 지난달 19일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 은행에서 인출한 돈을 집에 보관하게 한 뒤 훔쳐간 혐의(절도 등)로 중국인 불법체류자 C(29)씨를 구속했다.

C씨는 지난달 9일 오전 10시25분께 광주 북구 80대 여성의 집에 들어가 냉장고에 보관돼 있던 2200만 원을 훔치는 등 전주·군산·경주·청주·순천 등지에서 총 7차례에 걸쳐 1억6700만원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처럼 보이스피싱 범죄는 수사기관과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해 자금 이체와 현금 전달을 요구하는 수

범이 주를 이루고 있다.

최근에는 자녀 납치 빙자, 가짜 홈페이지, 인터넷 도메인 기간 연장, 가상화폐 해킹 미끼 등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고 있다.

보이스피싱 사기단은 ‘개인정보 유출·해킹, 계좌 범죄 연루, 예금 보호’를 명목으로 돈을 인출해 안전한 장소에 맡기거나 금융기관 직원에게 ‘전달해달라’는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속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또 신용 등급 상승, 보증 협약 가입, 거래 실적, 저금리 전환 대출을 미끼로 한 금품 요구를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1월~12월) 광주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 193건으로 352명(45명 구속·피해액 21억)이 검거됐다.

신봉우 기자

## 7월 말~8월 초 하천·강 물놀이 안전사고 55%

### 수영미숙 최다

국민안전처는 여름방학과 휴가철인 7월 말에서 8월 초에 바다와 하천, 강에서 물놀이 안전사고가 급증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13일 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5년 간(2012~2016년) 6월 초순에서 8월 하순까지 발생한 물놀이 안전사고를 분석한 결과 총 157명이 사망해 연평균 31.4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하천·강에서 발생한 사고가 전체 사고의 55%를 차지했다. 5년 간 하천과 강에서 84명(연평균 16.8명)의 사망자가 발생해 계곡, 해수욕장 보다 인명피해가 훨씬 많았다.

특히 여름방학과 직장인들의 휴가가 겹치는 7월 말~8월 초에 발생한 사고가 전체의 55%(46명)를 차지했다.

수영미숙이 35%(29명)로 가장 많았고 안전부주의로 인한 사고도 33%(28명)로 이와 비슷하게 발생했다. 이어 학교에 휴학된 경우가 14%(12명), 음주수영이 12%(10명)로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는 10대가 38%(32명)로 가장 많았고 이어 20대 26%(22명), 50대 12%(10명), 30대 11%(9명) 순으로 나타났다.

하천과 강은 해수욕장에 비해 다양한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에 물놀이를 즐길 때에는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안전처는 당부했다.

뉴시스



**여름엔 포도지!** 13일 경남 거창군 가창읍 정장리 소래포도 작목반 농민이 여름 휴가철에 인기가 높은 캠벨얼리 포도를 수확하고 있다.

## 환자가 의료서비스 질 평가하는 ‘환자경험조사’ 개시

### 약 15만 명 대상 전화 설문

올해부터 대형병원의 의료 서비스 질 평기에 ‘환자 경험’이 포함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17일부터 3~4개월간 ‘2017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계획’에 따른 ‘2017년 환자경험조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조사는 삼급종합병원과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총 95개소에서 하루 이상 입원 경험이 있는 약 15만명을 상대로 전화 설문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사내용은 입원 중 경험한 의

사·간호사 서비스, 투약 및 치료과정, 병원 환경, 환자권리보장 등 24개 문항이다.

▲의료진들이 환자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어주었는지 ▲치료과정 중 치료내용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주었는지 ▲퇴원 후 치료계획·입원 중 회진시간 등에 대한 정보제공을 받았는지 등 주로 환자가 입원기간 중 겪었던 경험을 묻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미국, 영국, 네덜란드 등 선진국에서는 환자가 체감하는 의료 질 향상을 위해 2000년 대초부터 꾸준히 환자경험을 조사하고 있다”며 ‘환자경험조사’를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환자

중심 의료문화를 함께 만들어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환자경험 조사 결과는 요양급여 적정성 평기에 반영된다. 이번 평가는 건강보험으로 제공된 진찰·수술 등 의료서비스 전반에 대해 의약학적·비용효과적 측면에서 적정한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내년 4월까지 결과 산출해 발표하고, 이후 의료평가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상·하위 또는 개선기관에 대해 진료비의 1~5%를 가·감 지급하는 등 결과 활용방안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

뉴시스

## 말레이시아, 이슬람 범죄 공개처형 논란

말레이시아 동남부에 위치한 켈란탄 주(州)가 공개처형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해 논란이 되고 있다.

말레이시아 내부에서는 개정된 법이 위헌이며, 소수 종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13일 현지매체 말레이시아선에 따르면 켈란탄 주는 지난 12일 이슬람 형법의 규제 조항을 개정해 공개처형을 가능케 했다. 켈란탄 주는 보수 성격의 이슬람 정당인 PAS가 이끌고 있다. 이곳에서는 나이트클럽과 영화관이 불법이다.

모드 아마르 니크 압둘라 켈란탄주 부주지사는 관영 베어나마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공개처형을 할 수 있도록 한 개정 법은 이슬람 형법에 따라 형량을 줄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통과됐다”며 “현재 처형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감옥 안에서나 밖에서나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공개처형은 종교적 요구 사항에 부합하는 것이다”라며 “샤리아(엄격한 이슬람 율법)에 따르면 형벌은 반드시 공공장소에서 행해져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공개처형은 켈란탄의 이슬람법원이 판결한 문제에만 적용된다. 어떤 범죄에 적용되는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현지 언론들은 간통이 포함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말레이시아는 이종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슬람 법원은 무슬림의 종교적인 문제와 이혼, 양육권, 상속, 간통 등을 다룬다. 범죄 사건은 연방 법원을 따른다.

말레이시아의 이슬람교도들은 전체 인구 중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는 중국계, 인도계, 다른 소수 민족이 차지하고 있다. 비 이슬람 말레이시아인들은 최근 주정부의 엄격한 시리아 시행이 이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디민족 사회구조를 외해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립 여당인 말레이시아 중국연합은 성명을 통해 “공개처형은 연방 헌법에 위배된다”며 “PAS는 평위의 범인 연방 헌법을 짓밟는 매우 위험한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다. 말레이시아에 암울한 미래를 불러올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체널뉴스와 사이에 따르면 켈란탄주는 지난 2015년 시리아(엄격한 이슬람 율법) 법원의 권한을 확대하고 후두드(엄격한 이슬람 형법)의 일부를 현행 법 체계에 편입시키는 법안을 제출했으나 연방 헌법이 이를 금지함에 따라 시행되지 않았다. 후두드에 따르면 간통을 저지른 사람은 돌팔매질을 당하고, 절도를 한 사람은 손목 등이 절단될 수 있다.

## 日, 2명 사형 집행…아베 재집권 후 19명째

일본에서 13일 사형수 2명에 대한 형이 집행됐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법무성은 13일 1991~1992년에 여성 4명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이 선고된 니시카와 마사카쓰(西川正勝·61)와 2011년에 여성 1명 살해 혐의로 사형이 확정된 스미다 코이치(住田紘一·34) 등 2명에 대해 사형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일본에서 사형이 집행된 것은 지난해 11월 이후 8개월 만이다. 2012년 12월 이베 신조(安倍晋三) 2차 내각 출범 이후로는 19명째 사형이 집행됐다.

일본에서도 사형제 존폐 논란은 끊임 없다. 일본변호사회회는 2020년까지 사형제를 폐지하고 종신형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변호사나 피해자 단체 등은 사형제 존지를 주장하고 있다.

## 멕시코 고속도로 대형 싱크홀, 차량 두대 삼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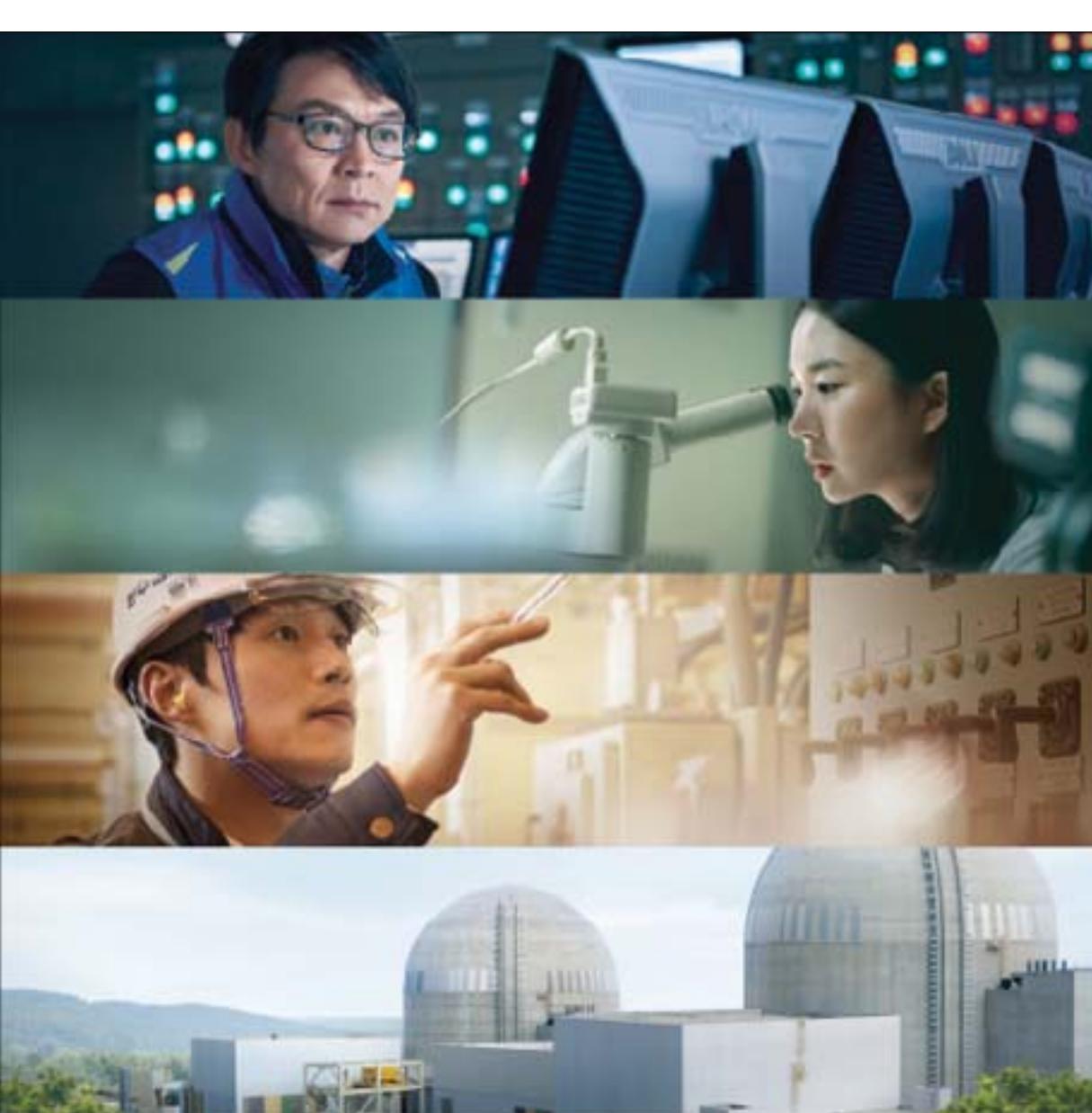
멕시코의 수도 멕시코 시티 인근의 주요 고속도로에서 12일 새벽 6시께 (현지시간) 지반이 침하되면서 대형 싱크홀이 생겨 지나가던 승용차를 삼키는 바람에 타고 있던 아버지와 아들이 숨졌다.

민방 구조대는 이 고속도로 구간을 폐쇄하고 8시간동안의 구조작업을 벌인 결과 구멍 밀비단에 뒤집힌 채 추락해 흙더미를 뒤집어 쓰고 있는 폭스바겐 제타 차량에 도달할 수 있었다.

이 싱크홀은 고속도로 한 가운데에 자선 2개 정도 넓이의 큰 구멍이 생기며 발생한 것으로 구조대는 크레인을 타고 밑으로 내려가야 했다. 구멍 크기는 구조작업을 위해 확장하는 바람에 좀더 커졌다.

연방교통국의 제라ルド 루이스 에르파르사 장관은 이 싱크홀의 원인이 고속도로 지하 15 m 지점에 묻힌 하수관이 부식으로 파열되면서 지반 침하가 일어난 때문인 것 같다고 말했다.

뉴시스



우리 땅, 우리 가족, 우리 국민이기에

## 우리의 기준은 단 하나, 안전입니다

기준 초과 지진 발생 시 원자로 자동정지시스템 구축

100여개 항목의 운영기술지침서에 따른 안전점검 준수

경주지진의 63배 에너지에도 끄떡없는 내진설계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한빛원자력본부